

현안 보고

외교안보정책실
수석연구위원 이윤식

한미 정보동맹의 위기와 안보위험 증대

2026년 10월 19일

한미 정보동맹의 위기와 안보위험 증대

- 정보협력 제한·연합방위 갈등과 정부의 동맹관리 책임 -

2026. 10. 19. (월) 외교안보정책실장 이 윤 식

- 한미 정보동맹의 신뢰 균열이 양국 간 정보협력 제한과 연합방위 갈등으로 표면화되며 국가안보 위기로 확산
 -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일부 제한과 정보·방첩 분야의 우려 표명, 국정원 인력 교류 마찰 등으로 한미 간 전략적 불신이 가시화
 -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정보협력 문제가 논의됐으나 ‘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, 백악관 고위급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’고 인정
 - 오산기지 압수수색,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, 미국 기업 차별 논란에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의 공개적 이견까지 표출
- 정보동맹 균열이 대북경보·연합방위·확장억제의 '3대 안보위험'으로 전이될 가능성 증대
 - 북핵·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정보공유의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△대북 탐지·조기경보 지연, △연합작전 차질, △확장억제 신뢰 저하와 북한의 오판 위험 확대
 - 정보협력의 신뢰 훼손이 실제 군사적 취약점으로 전이되기 전에 정보보안 체계와 한미 공동대응 역량을 조속히 복원할 필요
- **李 정부의 동맹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과 안보라인 쇄신, 정보협력 정상화 시급**
 - 대통령실은 미국의 문제 제기와 정부 대응 경위를 밝히고, 정동영·이종석 등 안보라인의 책임과 대미 신뢰관리 역량을 전면 점검해야 함
 - 동시에 △정보보안 개선, △대미 고위급 협의 복원, △대북정보 공유 정상화, △전작권 전환 조건의 한미 공동검증 등 실질적인 수습 조치를 조속히 추진

I. 문제 제기: 한미 정보동맹의 위기,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

- 한미동맹의 중대한 위험은 동맹의 형식적 존속 여부보다 상호 신뢰의 약화로 핵심 안보협력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음
 -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정보·방첩 분야에 대한 직설적 우려 표명은 한미 간 전략적 신뢰가 ‘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님’을 보여주는 징후
 - △오산기지 압수수색(25.7월), △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(26.3월), △美 기업 차별 논란(7~9월), △국정원 직원 비자 문제(10월) 등 마찰이 누적되면서, 정부의 동맹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 확대

- 특히, 한미 정보협력의 문제가 실무 차원을 넘어 외교장관 간 협의 의제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
 - 10월 12일(현지시간)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대사는 9월 18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정보협력 문제가 논의됐으며, 미국 측의 우려가 “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”고 인정
 - ‘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음’을 공개적으로 밝혀, 동맹 신뢰 회복이 외교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으로 확장되고 있음
- 문제는 정보협력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**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군 당국의 이견까지 공개 표출**되면서, 동맹관리의 부담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
 - 미국 측은 변화된 북한 위협과 작전환경에 상응하는 검증을 강조한 반면, 한국 국방당국은 기존 전환 조건의 변경 가능성에 반발
 - 정보보안과 연합방위 갈등이 동시 표출된 상황에서, 현 정부의 ‘외교·안보적 자율성’ 추구가 미국의 對韓 신뢰 회복보다 앞서고 있는 건 아닌지 엄중한 점검 필요
-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**이러한 갈등이 북한의 핵·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**
 -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10월 14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(SLCM) 발사 등은 한미 공동 감시·추적 및 조기경보체계의 중요성을 부각
 - 정보협력의 신뢰 훼손이 장기화되면 대북 정보감시·연합방위·확장억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, 미북 직접대화 가능성과 맞물려 한국의 전략적 입지도 약화될 우려
-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보공유의 절차 문제가 아니라 **△미국의 對韓 신뢰, △정부의 ‘외교·안보적 자율’ 노선, △대통령의 동맹관리 책임이 결합된 국가안보 문제**라는 데 있음
 - 본 보고서는 한미 정보협력 갈등의 실체와 안보 파급효과를 분석하고, 현 정권의 책임과 동맹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및 당 차원의 점검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함

II. 한미 복합 갈등의 심화와 정보동맹 위기의 실체

① 한미 갈등의 전방위적 확산: 외교·안보·통상 마찰의 누적

- 최근 한미 갈등은 개별 현안을 넘어 외교·안보·통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미국의 對韓 신뢰와 한국 정부의 정책적 예측가능성에 관한 문제로 확대
 - △오산기지 압수수색(25.7월), △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(26.3월),

△쿠팡 ‘차별’ 논란(7~9월), △국정원 직원 비자 발급 보류(10월) 등 상이한 분야의 마찰이 잇따라 발생

- 개별 사안의 성격과 발생 경위는 다르지만, 잇따른 마찰과 수습 지연은 현 정부의 정보관리·정책 조율·대미 소통 역량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

○ 한미 간 이견은 **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 문제에서도 공개적으로 표출**

- 10월 14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‘북한 위협과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기준의 필요성’을 강조했고, 반면 한국 국방부는 기존 조건을 계속 변경하는 방식 (“*골대를 자꾸 옮기면 영원히 골을 넣을 수 없다*”)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
- 이는 전작권 전환 자체에 대한 찬반을 넘어, ‘**변화된 안보환경에서 연합방위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**’에 관한 양국 간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

○ 미국 의회에서도 **한국의 대중정책과 동맹의 전략적 방향**에 대한 우려가 제기

- 존 물레나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9월 말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△한국의 대중 접근, △중국 내 반도체 투자, △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문제를 지적
- 한미 간 마찰이 “한국의 전략적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”을 경고하며, 한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면밀한 점검을 촉구

② **정보협력 제한 논란의 심화: 미국은 왜 한국의 정보보안을 문제 삼는가**

○ 한미 정보협력 문제는 3월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본격화됐으며, 일부 **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정보기관 간 마찰로 구체화**

- 鄭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공개 발언 이후, 미국이 위성 수집 대북 기술정보의 일부 공유를 제한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옴
- 특히, 10월 14일 조선일보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정보공유 제한의 지시 주체가 국방정보국(DIA)이 아닌 국가정보국(DNI)이라고 보도. 사실이라면 **개별 기관의 실무 판단을 넘어 미 정보공동체 차원의 신뢰 문제로 확대됐을 가능성**
 - 10월 8일 진영승 합참의장도 “미국의 대북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으며,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”고 인정

○ 정보기관 간 마찰은 **한미일 협의체 운영과 정보기관 인력 교류에서도 표면화**

- 6월 워싱턴에서 열린 <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>에 국정원이 미국 CIA의 배제 요구로 불참한 사실이 확인
- 10월에는 주미대사관 파견 예정 국정원 직원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보협력 갈등이 외교 현안으로까지 확대

- 미국은 10월 9일 한국이 정보·방첩 분야에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
 - 이는 단순한 정보공유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**한국이 미국의 민감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동맹의 보안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가**에 대한 신뢰 문제
 - 정보협력의 핵심은 수집능력뿐 아니라 제공 상대에 대한 보안 신뢰라는 점에서, 이번 사태는 한미 정보동맹의 작동 기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 해석

③ 현 정부 주미대사의 공개 진단: 정보협력 난제와 외교 현장의 위기 인식

- 10월 12일(현지시간)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정감사에서 **정보협력을 한미 간 어려운 현안으로 지목**하며, “미국 측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”고 인정
 - 9월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고 확인해 정보협력 갈등이 외교장관급 협의 의제로 격상됐음을 보여줌
 - 백악관 국가안보회의(NSC) 등 고위급과의 소통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진술(“저도 답답할 정도”) 역시 동맹관리의 실제 어려움을 드러낸 대목
- 주목할 점은 현 정부가 임명한 주미대사 스스로 정보협력 문제와 고위급 소통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설명했다는 사실
 - 이는 정보기관 간 신뢰 회복과 대통령실 차원의 대미 협의가 별개가 아니라 함께 관리해야 할 외교·안보 과제임을 의미

④ 외교 기조의 충돌: 미국의 전략적 불신과 대통령의 동맹관리 책임

- 미국 내 우려는 정보보안 문제를 넘어 **이재명 정부의 친중적 대중 인식과 정책적 지향에 대한 전략적 불신**으로 확대
 - 물레나 위원장의 서한은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과 첨단기술 협력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갈등이 동맹의 전략적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경고
 - 이종석 국정원장의 대북·대중 인식에 대한 미국 내 불신 역시 10월 초 언론 보도 (“*미 CIA가 이 원장을 ‘친중 인사’로 못박음*”)를 통해 제기됐으며,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신뢰가 양국 협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
-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“**굴종적·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**”며, ‘외교적 자율성’을 강조
 - 미국의 정보·방첩 우려와 주미대사의 위기 진단이 잇따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원칙적 수사보다 미국의 불신을 해소할 구체적인 조치와 고위급 협의의 복원
 - 결국 한미 정보동맹의 신뢰 위기는 △정부의 대북·대중 정책, △안보라인 인사, △대통령의 전략적 판단과 동맹관리 책임이 결합된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

III. 정보동맹의 신뢰 위기가 초래할 ‘3대 안보위협’

① 대북 정보감시의 위험: 북핵 미사일 탐지 및 조기경보와 대응능력 약화

-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 약화가 초래할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·추적·분석·조기경보체계의 효율성 저하
 - 한국군의 지상·해상·공중 감시자산이 확충되고 있지만, 북한 전략무기 동향과 발사 징후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찰위성·신호정보·조기경보 자산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
 - 특히,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·시점·정밀도가 제한될 경우, 한미 간 위협 평가와 대응 판단의 시간적 격차가 확대될 위험
-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정교화는 한미 정보공유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더욱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만드는 요인
 - 극초음속 미사일의 고속·변칙 비행과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(SLCM)의 은밀성 등은 기존 탐지·추적·요격체계에 추가적인 부담
 - 특히, 이동식 발사대(TEL)의 분산 운용, 발사 징후 은폐, 저고도·변칙궤도 비행 등이 결합될 경우, 사전 탐지부터 발사 이후 항적 추적과 목표 식별까지 연속적인 정보융합이 필수적
- 정보공유 제한의 핵심 위험은 정보량 감소 자체보다 실제 작전에 필요한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
 - 위성영상·신호정보·레이더 탐지정보의 통합이 지연되면, 위협 수준에 대한 공동 판단과 군 지휘부의 대응 선택에 큰 부담으로 작용
 -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보협력의 균열이 장기화될 경우, 한미 공동 조기경보의 실효성과 위기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현저히 저하될 위험

② 연합방위의 위험: 전작권 갈등과 지휘체계 불안정

- 한미연합방위의 실효성은 양국의 군사력뿐 아니라 동일한 위협에 대한 공동 상황판단과 작전계획·지휘체계의 일관성에 기반
 - 연합사령부의 위기관리와 작전계획 실행에는 양국 정보체계의 지속적인 연계와 지휘통제체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
 - 정보공유의 적시성이나 접근 권한에 차질이 발생하면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의 속도와 일관성이 저하될 위험

- 특히, 최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연합방위의 미래 지휘체계에 대한 공동 인식이 충분히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
 - 한미가 합의한 조건 기반 전환은 △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, △동맹의 포괄적 북핵·미사일 대응능력, △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
 - 북한 위협과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검증 기준의 적용을 둘러싸고 양국 간 이견이 표출된 만큼,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공동의 평가와 합의가 필요
-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주권적 명분이나 정치적 일정이 아니라, **변화된 안보환경에서도 한미연합방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**에 있음
 - 한국군의 지휘능력과 미국의 정보·감시·정찰 및 확장억제 자산의 연계, 연합작전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
 - 정보협력의 신뢰 회복과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을 각각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, 연합방위 준비태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

③ 확장억제의 위험: 북한의 전략적 오판 가능성 증대

- 정보동맹의 신뢰 약화가 초래할 중대한 전략적 위험은 **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자체보다 그 실행 과정에 대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 확대**
 - 확장억제는 미국의 핵·재래식 전력뿐 아니라 북한 핵사용 징후에 대한 공동 평가, 대응수단 협의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결합될 때 실효성 확보
 - 한미 간 정보판단과 고위급 소통에 균열이 발생하면 위기 시 대응의 속도와 일관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, 억제 신호의 신뢰성에도 부담
- 특히, 한미 핵협의그룹(NCG)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확장억제 협력 역시 긴밀한 정보공유와 정책·군사적 협의를 핵심 전제로 함
 - 북한의 핵·미사일 운용 징후에 대한 위협 평가와 핵·재래식 통합 대응의 협의 과정에서 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은 필수적 요소
 - 정보협력 제한과 고위급 소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, **확장억제 협력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증폭**
- 북한이 한미 간 이견을 군사 도발이나 대미 협상에 **활용할 가능성도** 경계해야 함
 - 한미의 위협 평가와 대응 의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, 북한이 제한적 도발을 통해 동맹의 대응 수준을 시험할 위험
 - 미북 직접대화 가능성까지 맞물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되거나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‘통미봉남’ 전략을 재가동할 위험도 배제 불가

- 결국 정보동맹의 신뢰 위기는 ①대북 조기경보의 약화, ②연합방위의 불확실성, ③ 확장억제의 신뢰 저하를 통해 한반도 안보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, 실제 군사적 취약점으로 전이되기 전에 협력체계의 정상적 작동을 확보해야 함

[표 1] 한미 정보동맹 신뢰 약화에 따른 '3대 안보위험'

	위험의 전이경로	안보적 파급효과
대북 정보감시	정보공유 제한 → 탐지·추적·분석 지연 가능성 → 공동 상황판단 약화	- 조기경보의 적시성 저하 - '대응 골든타임' 축소
연합방위	정보 접근·공동 판단의 불일치 → 작전계획 및 지휘협조 차질	- 연합작전의 효율 저하 - 전작권 전환 검증 부담 확대
확장억제	정보 신뢰 약화 → 핵위협 공동평가·협의 지연 → 억제 신호 불일치	- 북한의 군사도발 유인 증가 - 전략적 오판 위험 확대

IV. 한미 정보동맹 위기,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

① 정동영·이종석을 둘러싼 안보라인 인사책임론

- 한미 정보협력의 위기는 안보라인의 발언과 판단, 인사 적절성을 점검해야 할 단계
 -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과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 사이의 경위 및 연관성을 규명하고, 민감한 안보정보를 다루는 고위 공직자의 발언과 정보관리 책임에 대한 규명 필요
 -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미국 내 불신 보도와 국정원 직원 비자 문제 역시 정보 기관 수장의 대외 신뢰가 실제 정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보여주는 사안
- 특히, 정동영과 이종석 관련 논란은 한미 정보협력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접근 필요
 - 정보기관 간 협력은 상대국 기관장에 대한 신뢰와 정보보안 기준의 준수를 전제로 하며, 신뢰가 훼손될 경우 민감정보 접근과 협력 범위에도 영향을 미침
 - 정부는 관련 인사의 발언과 정책 판단, 미측 문제 제기 및 실제 정보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, 결과에 따라 인사책임을 포함한 쇄신 조치에 나서야 함

② 대통령의 동맹관리 책임: 현실 인식의 한계와 안보라인 전면 쇄신

- 한미 정보동맹의 신뢰 위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외교·안보 노선을 결정하고 핵심 안보라인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음

- 정보협력 제한 논란과 미국의 공개적 불만 표출, 주미대사의 위기 진단이 이어졌음에도, 정부 차원의 신뢰 회복 전략과 가시적 수습 성과는 제시되지 않음
 - 이런 국면에서 대통령이 ‘굴종외교·사대외교’ 극복을 강조한 것은 동맹 신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외교적 자율성 문제로 접근한다는 비판이 다수
- 대통령은 한미 정보협력 갈등을 국가안보의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, **대미 신뢰 관리 역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함**
- 미국의 정보보안 우려가 어떤 경로로 제기됐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보고·대응했는지 대통령실 중심의 책임 있는 점검 필수
 - 특히, 정보협력 신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내 성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고, 외교·국방·정보기관의 정책 조율과 대미 협상 역량을 전면 점검할 필요

③ 정보동맹의 신뢰 복원: 한미 안보협력 정상화를 위한 ‘3대 선결과제’

- 첫째, 정보보안 신뢰 회복과 정보공유 제한의 조속한 정상화
- 한미 정보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의 우려사항과 정보공유 제한의 범위·해소 조건을 확인하고, 정보관리 절차 및 보안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
 - 대북 감시·조기경보에 필수적인 정보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군·정보기관 차원의 협력체계를 우선 복원
- 둘째, 대통령실 중심의 동맹관리체계 재정비와 고위급 소통 복원
-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·국방·통일·정보기관의 대미 정책과 메시지를 통합 조율하고,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사전 협의체계를 강화
 - 백악관·국무부·국방부·정보공동체를 포괄하는 고위급 협의를 복원하고,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와 미래연합사 지휘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검증을 추진
- 셋째, 대북·대중정책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정합성 회복
-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인식을 확고히 하고, 한미일 정보협력과 확장억제 협의체의 실효성을 점검
 - 미중 전략경쟁 속 한국의 안보·경제적 이해를 명확히 하되, 대중관계 관리가 핵심 안보정보 보호와 동맹의 전략적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립

④ 책임 규명 요구와 국가안보 점검과제

-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의 실효성과 국민의 생명·안전을 좌우하는 정보동맹 신뢰 문

제로 규정하고,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시정을 요구해야 함

- 국회 외교통일위원회·국방위원회·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경위와 범위, 국정원 비자 문제, 한미 고위급 협의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
- 대통령실의 상황 보고·위기 대응 과정과 안보라인 인사의 책임 여부를 검증하고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국회 차원의 추가 조사 요구

○ 정부의 동맹관리 성과는 선언적 외교 수사보다 정보협력의 정상화와 군사적 대비태세의 유지 여부를 통해 평가해야 함

- 미국 측 우려 해소, 정보공유 정상화, 고위급 소통 복원의 구체적 이행계획과 점검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구
- **한미 정보동맹의 신뢰는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음.** 정부는 문제의 실체와 책임을 규명하고, 정보보안과 연합방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통해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